



배포 일시	2023. 3. 5.(일)		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 이소영(044-201-4539)
		담당자	사무관 송우영(044-201-4514)
	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	책임자	과 장 한성수(044-201-5202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영(044-201-4538)
	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 정진훈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 지현근(044-201-3351)
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 우정훈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 홍 철(044-201-4990)
			사무관 김병철(044-201-3521)
	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	책임자	과 장 장우철(044-201-3504)
담당자		사무관 김효석(044-201-4597)	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,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각적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연합뉴스, 3.5) >

◆ 건설현장 비상

- ① 파업 후유증에 서민주택도 줄줄이 ‘입주차질’
- ② 타워크레인 준법투쟁에 “1개층 올리는데 1~2일 더 걸려”
- ③ 정비사업도 공사비 인상 놓고 곳곳서 파열음

□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해 서민들의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, 전체 공정에 대한 일정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○ LH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공공주택사업 참여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해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부과 제외 등을 포함하는 계약 지침을 관할 현장에 즉시 전달한 바 있으며(`22.12.7),

- 이에 따라 이미 4개 현장은 시공사 등 관련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, 현재까지 관련업체에 지체상금 부과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.
 - 또한, LH는 3월 중 공사중단·차질 등이 발생한 190개 공사현장에 대해 2차 조사를 추진하여 시공사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공사지연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정부는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인한 공사중단이 건설업계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,
- 일반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「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」 제17조에 따라, ‘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’ 로 유권해석하여 건설업계에 안내한 바 있으며(`22.12.8),
 - 아파트에 대해서도 「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」 상 지연배상 원칙에 대한 예외사유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(`23.1.6).
 -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건설협회, 주택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건설사들에게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특정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, 비노조 조종사에 대한 공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정부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,
- 현재까지 공사 진행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, 관계 부처, 협회 및 업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 - 고용노동부는 그간 현장에서 폭 넓게 해석되었던 타워크레인 안전기준에 대해 관련 안전규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한 행정해석을 안내한 바

있으며('23.2.27),

-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관련 안전규정이 제정 취지와 다르게 이용될 경우 신속한 유권해석,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정비 등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또한, 지난 2.28일 「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관련 가이드라인(안)」을 배포하며, 3.1일 이후 성실한 근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최대 1년 까지 자격을 정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,
 -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,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신속하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
 - 아울러, 민간 업계나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체 조종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으며, 조종사 개개인도 과도한 월레비 수수 등 그간의 관행을 벗어나 정당하게 근무하려는 조종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
- 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건설업계의 피해와 국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난 2.21일 발표한 「건설현장 불법·부당 행위 근절대책」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나가는 한편,
 - 건설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추가대책도 지속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